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20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자	·과장 김동준, 사무관 김종욱 ·☎ (044) 201-3832, 3827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정부는 노·사·정 협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- 국토부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노·사·정 합의에 기반한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」(18.12.27)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버스 운행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
 -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」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측, 사측과 함께 ‘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’을 체결(18.12.27)한 바 있으며,
 - 노·사·정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‘버스운수산업위원회’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중입니다.
 - * 노측(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), 사측(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), 시민단체(녹색교통본부),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정부는 노·사·정 합의에 기반하여 마련한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」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.
 - (경영 부담 완화)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‘일자리 함께하기’ 사업*을 적극 추진 중이며,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운임·요금도 현실화하였습니다.
 - * 신규 채용 인건비 최대 80만원, 기존 근로자 인건비 최대 40만원 지원
 - (인력 양성)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지자체 협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, 17개 시·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('19.3.14) 하였으며,
 - 금주부터는 버스업계 등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'19.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이 적용되는 지자체·버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력 채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노·사·정 협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,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함으로써 '19.7월에도 노선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 3.20(수).) >

7월이면 전국 버스기사 7천명 필요한데...국토부는 “큰 문제 없을 것”
 -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도 국토교통부의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려워
 -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는 상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중욱사무관(☎ 044-201-3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